

제공일자	2013. 11. 25(월)	담당자	이태열 고령화연구실장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02-3775-9051)	연락처	02-3775-9010 010-8226-6598	총3매

제목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 보험 역할 제고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보험연구원(원장 강호) 이태열 고령화연구실장은 고령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공·사 사회안전망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복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
- 공공 부문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큰 폭의 개혁보다는 최소한의 점진적 부담 증가와 같은 현실적 대안을 통해 재정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민영 부문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경영의 우선 순위를 '성장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적 연금과 관련해서는 중위층의 연금 가입 확대와 퇴직 급여의 안정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

□ 보험연구원은 26일(화)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과적인 역할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세미나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적·사적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복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음.
-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태열 고령화연구실장은 현세대가 공적 복지 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부담 증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민영부문은 고령층이나 중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복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주제 발표 이후 김용하 교수(순천향대)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는 관련부처, 의료, 복지,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공공은 점진적 부담 증가에 합의, 민영은 취약 계층에 대한 역할 확대

-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의 지속이,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적 복지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음.
 - 민영부문도 여유있는 계층으로 보장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최근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이 미미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이념, 계층, 이해 집단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음.
- 공공 복지는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큰 폭의 개혁보다는 **완만하고 점진적인 부담 증가와 같은 현실적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도 재정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0.15%p 수준의 요율 인상**(2054년까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40년까지 매년 약 **1.5%의 추가 수입 증가**(매년 0.1%p 수준의 요율 인상과 유사)로도 재정 안정성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국민연금의 경우 **미래세대가 출산율 개선, 근로기간 확대, 이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을 통해 요율 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근본적인 체제 변화와 같은 개혁은 미래세대가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의 축소 등을 통해 요율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동시에 **총의료비의 증가가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

- 보편적 복지를 대표하는 급여부문과 의료시장의 시장 경쟁을 대표하는 비급여 부문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급여 대상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의료 정보 공급 능력의 확보가 필요

□ 민영 복지의 경우 공공 복지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취약한 분야에 대한 보장 서비스 공급 확대가 필요함.

- 우리나라 가계의 미래 노후소득을 소득 5분위 별로 추정한 결과, 중위층(3분위)은 사적 연금의 충실도에 따라 노후 소득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
- 사적연금을 통한 중위층의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 급여 안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건강보험은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보장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과 이를 위한 공·사간의 협력이 필요
- 민영부문이 공공부문의 의료비 억제 노력에 동참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며,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 속에서 비급여 표준화 및 제3자 청구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강호 보험연구원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공공 복지의 밑그림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역할을 수행하는 민영보험부문의 경영 환경은 지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하루 빨리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의 막연한 복지 불안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별첨>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